

한-미 경제 파트너십: 세계적 위기의 시기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Jeffrey J. Schott

오늘 이 모임을 주선하여 저를 불러준 데 대하여 감사 드린다. 한국을 방문하여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일은 늘 큰 기쁨이다. IGE의 새 원장 남박사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은 특별한 영예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이 자리에서 연사로 섰을 때 나는 무역정책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었다. 보호주의적 압력이 점증할 것이고 무역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이 표류를 거듭할 것이라는 나의 예측은 불행하게도 그대로 들어맞았다. 한-미 두 나라는 계속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양국간의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관점이다. 즉, 두 나라의 파트너십(partnership) 전반에 관한 문제와 세계적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두 나라가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잘 알려진 바처럼, 지금 우리는 대공황이래 최악의 경제침체를 겪고 있다. 최신 월간 자료에 따르면 다소의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지난 몇 분기 동안 있었던 급격한 하강곡면에서 벗어나 힘찬 회복의 곡면으로 들어섰다고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달 초 IMF는 2009년 세계의 총생산은 1.4% 줄어들고 2010년에 약하게 반등을 하리라고 예측했다. 미국의 GDP가 2.6%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끔찍한 일이다. 물론 일본과 유럽지역은 미국보다 더 큰 하락을 겪을 것이긴 하다. 중국과 인도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겠지만 세계의 경기침체는 더 심각할 수도 있다. 두 나라도 2000년대 초반에 보여 준 최고치의 성장률보다는 많이 떨어져있다. 상대적으로 반가운 소식은 2010년 세계경제는 견실한 상승세를 탈 것이지만 중국을 제외한 G-8 국가들은 무기력한 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란 IMF의 예측이다. 지난 6월 미국의 실업률은 26년 만에 가장 높은 9.5%를 기록했으며, 내년 초에는 1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경제대국에서 국내산업을 보조하고 보호하라는 압력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 이 글은 2009년 7월 21일 개최된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임.

지금 한국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의 긍정적인 월간 무역통계수치를 지나치게 믿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한국경제는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회복의 속도는 결국 세계경기의 회복 속도와 궤를 같이 할 것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IMF의 연간 평가보고서는 단기전망에서 한국 지식경제부의 전망보다 비관적이다. 한국의 GDP는 올해 3% 하락할 것이며, 미국처럼 2010년부터 약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IMF는 보고 있다. 또한 미국처럼 한국의 실업률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 일어난 세계 수요의 급락과 무역금융의 마비는 국제무역을 강타했다. 지난 반년 동안 세계 무역은 24%가 줄었고, 이는 세계 총생산 하락보다 4배나 빠른 것이었다. 이것은 무역이 총생산보다 3배나 빨리 증가했던 지난 50년의 경험과 극명한 대조가 된다. 최근의 IMF 예측자료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의 세계 무역량은 금년에 12% 줄고 2010년에도 크게 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이며, 미래의 전망도 그다지 푸근한 것은 아니다.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우리 두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다. 지난주 내가 몸 담고 있는 연구소에서 래리 서머즈(Lawrence Summers)는 오바마 행정부가 발족했을 때의 경제를 “자유낙하 중”이라고 고백했다.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8천억 달러의 대대적인 부양책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미국 재무부와 연방정부는 주요 금융기관의 자본기반을 조성해주고, 급속한 파산과정 중에 있던 GM과 크라이슬러의 구조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야만 했다. 미국은 대규모 위기를 맞았으며, 아직 그 숲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바닥을 쳤고 조만간 회복국면에 들어가리라는 희망은 있다.

한국의 상황은 나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 한국정부는 산업을 받쳐주고 일자리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광범한 개입을 해 왔다. 한-미 두 나라는 각기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해 나갈 것이지만, 세계경제가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두 나라 모두 온전한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핵심적 문제다. 두 나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해 각기 국내적으로 많은 일을 하겠지만, 우리가 국내에서 행하는 일들이 장기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세계적인 경제회복을 확고히 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장기간 세계경제에서 주도권을 가졌었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내가 정부에서 일했을 때 세계경제의 주도권은 미국과 유럽의 G-2 체제였는데 그것이 일본과 캐나다를 포함한 4국 체제로 진화를 했다. 그것이 이제는 주로 유럽 국가들인 G-7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G-8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후 빈곤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이제는 공인된 경제적 수퍼

스타가 된 많은 나라들의 경제적 중요성과 지배력의 확산을 본다면 위에 거론한 체제로는 충분치 않다. 한국도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있고, 기꺼이 리더십의 책임을 감내하고 더 나은 세계경제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일하려는 국가집단에 속한다. 이것은 세계경제위기를 맞은 최근에 일어난 변화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G-20에서 의장단(Leadership Troika) 일원으로 지명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국은 국가간 공동보조에 의한 경제회복과 향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다자적 노력의 추진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은 이제 새로운 차원에 들어서게 되었다. 두 나라는 양자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협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세계경제의 책임 있는 지도국으로서 협력을 하게 되었다. 내가 한-미간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한국의 국제사회 참여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한국은 영국 및 브라질과 더불어 G-20의 의장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2010년 처음으로 G-20 회의를 주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9월 하순 피츠버그에서 열릴 차기 G-20회의에서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파트너십에 영향을 준 여러 요소들 중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의 창립자이며, 내가 속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와 매우 가까운 친구이고, 또한 한국정부의 주요한 경제적 자문역인 사공일 박사의 공적이 매우 크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공 박사는 거시적 경제정책과 무역에 관한 G-20의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백악관의 래리 서머즈를 비롯한 G-20 국가의 최고위 경제관료들과 긴밀한 업무 관계를 갖고 있다. 그는 위기에 대한 거시경제적 대응책 마련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깊이 간여하고 있는 국제무역협상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G-20은 정치인들이 경제적 하강국면에서 새로운 보호주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세계무역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치인들이 흔히 보이는 첫 반응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외국 공급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국내적 경기부양책에 외국의 공급자를 차별하는 정부조달규정을 포함시키고, 경제침체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국내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는 단연코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새로운 무역 자유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G-20은 보호주의의 철폐에 더하여 다자간 무역협상에 관한 도하 라운드(Doha Round)를 부활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한 폭 넓은 노력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 문제가 G-20과 최근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에서 쟁점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무역이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해결책 중 일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경제회복을 제한하는 문제꺼리의 일부가 될 것이다. 각국이 지속적으로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늘릴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주요 경제국에게 자국내의 보호주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수단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지만 내가 도하 라운드에 대하여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한-미 두 나라가 직면한 현안이면서 두 나라가 협력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토의할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며칠 전 나는 싱가포르에서 도하 라운드의 해법에 대한 처방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 전략에는 미국과 G-20 국가들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이 처방은 G-8 지도자들이 공약한대로 2010년 말까지, 그러나 아마도 2011년 초까지 협상타결을 한다는 목표아래 농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협상을 새로 시도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목표이긴 하지만, 당사국 장관들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보내는 등 최종적인 도하 패키지 창출에 필요한 매우 집중적인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조치가 9월에 피츠버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마도 G-20 정상회의 이전에 무역정책에 관한 중요한 연설을 할 계획이며, 이 연설에서 그는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한 폭넓은 대응책의 일환으로 무역을 들고 나올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지금 그의 국무장관이 된 힐러리 클린튼과 대결을 하면서 무역에 관해 쏟아낸 경솔한 말들 때문에 빚어진 우려와 불안을 상당히 씻어낼 것이다. 정치적 캠페인의 와중에서 나온 가혹한 언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한 후 달라졌다. 무역은 그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아니지만 그는 개방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를 굳게 약속해 왔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매듭짓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하겠다.

점증하는 보호주의

이제 점증하는 보호주의의 급박한 우려에 대하여 G-20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세계적 경제 조건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이미 악화된 사태를 더욱 나쁘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려는 압력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으며, 정책입안자들은 아래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호주의 압력에 처하게 될 것이다. 첫째, 경제가 안정되고 회복이 시작된 후에도 실업은 늘어날 것이다. 기업들은 고객의 주문이 보다 확고한 단계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급여인원을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에 완만한 경제성장이 다시 시작된다 하더라도

라도 현재의 불황 이전에 이룩했던 경제적 생산수준에까지 이르려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거리의 사람들과 지역 기업들이 몇 년 전만큼 잘 나가고 있다고 느끼는 데에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 정치인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지역 일 자리를 늘리고 지역 기업을 돕고자 하며, 바로 그런 이유로 국가적 경기부양책은 국내적 내용의 사업에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프로그램이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중국과 다른 나라들도 이것을 본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과 지난 4월 런던에서 나온 G-20 정상회의 선언은 새로운 보호주의를 배격할 것을 선언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사공일 박사 등 지도자들은 매우 강력하게 '스탠드스틸(standstill,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 원칙)' 공약을 앞장서서 밀고 나갔고, 그 뜻을 관철했다. 런던 정상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투자 또는 무역에 새로운 장벽을 쌓거나, 새로운 수출제한조치를 부과하거나, 또는 WTO규정에 위배되는 수출촉진정책을 도입하는 것 등을 2010년말까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이 약속과 어긋나는 조치는 WTO에 통보하고 즉각 바로잡기로 하는 내용을 한국 지도자들이 제안한 표현대로 합의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G-20 국가 중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G-20 참가자들은 예상보다는 더 잘했지만 세계적인 위기의 깊이와 폭을 감안할 때 그들이 응당 해야 할 만큼 잘하지는 못했다. 일부 G-20 회원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어겼으며, 그러한 조치 중의 일부는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무역 스탠드스틸도 잘못 이해되고 적용되었다. 일부 국가는 이것을 단순히 WTO 의무를 존중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WTO 규정아래서도 각국은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기타 방식으로 광범한 보호주의 조치를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되어있다. 더욱이 정부조달부문처럼 WTO 제재가 불완전하거나 결여된 분야에서 정부들은 WTO의 비난을 걱정하지 않고 외국 공급자들을 차별할 수 있다. 사실상 많은 스탠드스틸 위반사례가 이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

바로 그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다자간 규제를 강화하는 WTO 협상이 필요하고, 도하 라운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기본 입장은 분명하다. 세계적인 위기를 맞아 국제무역과 투자를 왜곡하는 조치는 그것이 WTO 규정에 합당하든 안 하든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세계경기 회복을 저해하고 향후 뻗어나갈 성장의 동맥을 틀어막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G-20 회의는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우선 스탠드스틸 선언을 공표하는 데서 출발했다. 지난 12월 나와 다른 무역

전문가들은 WTO와 세계은행에게 이와 관련한 일들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정상회의 공약을 위배하는 나라들을 “지적하고 질타하도록” 요청했다. WTO의 파스칼 라미(Pascal Lamy) 사무총장은 최소한 위반국가들을 지적하는 일을 떠 맡았다. 현재 WTO는 금융과 경제위기, 그리고 무역과 관련한 진전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보고서를 내고 있다. 최근의 보고서는 지난 주에 나왔는데, 제한조치의 증가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우려했던 만큼 광범위하지는 않다는 데 안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G-20 정책의 공적 감시의 핵심은 잠재적인 악용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새로운 보호주의 조치의 남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피츠버그 정상회의와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미국과 한국은 이러한 현상유지 공약의 범위를 넓히고 그것이 충실하게 구현되도록 공동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두 나라가 무역과 관련하여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자유화를 촉진하는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두 나라 정부가 피츠버그 회의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진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2010년 한국의 주도아래 진화하게 될 G-20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맡게 될 역할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몇 년은 세계경제의 운용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지난 몇 년간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G-8의 영향력은 뚜렷하게 쇠퇴하고, 한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을 G-20의 신뢰성과 영향력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진척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한국과 미국 양자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더러 G-20 회원국의 약 절반이 APEC지역 국가인 점을 감안할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계경제 지배권의 권위와 힘의 일부 균형이 대서양 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야 할 공동의 이익과 필요성을 지닌 또 다른 분야가 기후변화 문제이다. 기후변화는 매우 중요한 세계적 난제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모든 주요 가스배출국가들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주요 가스배출국가들이 획기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어떤 국가도 성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선진국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되 2020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할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 주고,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로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약속을 한 주요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공약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에 앞장을 서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금융위기 초기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 환경정책을 추진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를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8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과 10개년 예산청사진은 모두 재활사용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율,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송전기술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 행정부는 새로운 기후변화 입법의 통과에 많은 정치적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최근 근소한 차이로 2009년도 미국 청정에너지 및 안전법 - 워싱턴에서는 왁스만-마키(Waxman-Markey) 법안으로 알려짐 - 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이 법은 향후 온실가스 배출을 급속히 줄이는데 필요한 “캡 앤 트레이드(cap and trade)” 제도 도입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조정기간 중 국내산업에 무료배출허용 배정이나 직접 보조금 등으로 많은 보조금이 들어간다. 하원이 가결했으나 이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책상에 도달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 잘하면 상원이 10월까지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지만, 하원이 가결한 법안과는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 때문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협상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 합동회의는 금년 중 열릴 전망이 없다. 그러므로 미국 대표단은 2009년 12월의 코펜하겐 정상회의에 확고한 입법적 지침 없이 가겠지만 코펜하겐 회의가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그 지침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갈 것이다.

비슷한 과정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국은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미래로의 이동에 목표를 둔 새로운 “녹색 뉴딜” 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왔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코펜하겐 협정의 온실가스 방출에 대한 의무적 목표를 약속함으로써 지도력을 보여왔다. 새로운 세계적 협정을 확보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이익은 매우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위치에 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전폭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세계적 관리체제를 만드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부국이든 빈국이든 막론하고 모든 나라가 그 나라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개혁과 규제개혁에 나서도록 만드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기후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는 공짜였던 탄소의 가격을 상품에 보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탄소가격의 수준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생산하는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들 사이에서 자원의 재할당과 재배분이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이 세계적인 기후관리 체제를 창설하는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산업국가들은 온실가스를 방출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급격히 가스 방출량을 늘리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그렇게 많은 양을 배출하기 시작한지가 몇 십 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하다. 여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할 새로운 기술과 오염통제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늘리기 위해 부국에서 빈국으로 자원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은 폭넓은 파트너십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추구라는 양국의 세계적 야심과 국가적 경제정책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로 이것은 양국관계에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코펜하겐 협정을 창출하고 협정의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일을 시작한 시점이므로 양국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더욱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코멘트

사회자가 모두발언에서 강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연단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 대다수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듣고 싶어하는지 의문이다. 내가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뒤로 미룬 이유는 단순하다. 내가 방금 이야기한 거시적인 세계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협력을 통하여 만들어진 양국간의 우의는 현안과제에도 반영되어야 하며,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출범하는데 양국이 결속을 강화하며 남은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앞으로 6~9개월 안에 미국 의회에서 비준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런 전망에 내 목숨을 걸 수는 없지만, 내가 낙관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킨 이 협정의 자동차 조항과 미국과 한국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다른 조항들은 처음부터 잘못 제기된 것이었으며,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생산과 고용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 신빙성이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조인된 지는 2년이 넘었으며, 그 이후 자동차 부문의 생산과 고용은 급격한 축소를 겪었다. 금년도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연간 기준으로 950만대를 다소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몇 년 전의 1천7백만 대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포드, GM, 크라이슬러 등 3대 메이커의 판매는 2008년에 비해 40%나 줄었다. 이에 비해 현대와 기아가 미국시장 판매에서 소폭의 증가를 기록한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시장에서 마케팅을 잘 하면 기업에 도움이 되고, 파산을 하면 판매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한국 시장의 자동차 판매는 약간 줄었지만 자동차 수출시장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자동차의 국내생산은 크게 줄어들었다. 자동차와 SUV의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한-미 무역협정에서 추구하던 몇 가지 목표는 시장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타당성이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의 소형트럭 관세를 철폐하려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이 25%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되어있다. 그 목적은 한국의 SUV 생산설비에 투자를 장려하여 미국과 다른 주요시장에 이를 수출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SUV 시장의 수요는 붕괴했다. SUV 차량을

사는 사람이 이제는 그리 많지 않으며,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한국이나 여타지역에 새로운 SUV 생산설비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해 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그러나 GM 및 크라이슬러의 파산과 경쟁 상황에 영향을 주는 회사들에 미국 정부가 퍼부은 막대한 액수의 보조금 등 다른 측면들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많은 비판을 무효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처음부터 그러한 비판은 그다지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낙관하는 둘째 이유는 한국과 EU 자유무역협상이다. 한국-EU 자유무역협상의 조인과 이행이 임박함에 따라 한국시장의 미국 자동차메이커들에게 경쟁적인 도전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나의 동료인 프레드 버그스텐(C. Fred Bergsten)은 경쟁적 자유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경쟁적 자유화의 명쾌한 사례이다. 미국이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게 되자 유럽은 한국 시장에서 유럽기업들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고, 보다 개방적인 경쟁에서 오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상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이다. 미국 의회는 자유무역협정 기준을 지체함으로써 미국이 무역협상의 이익을 거두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뒤따라 온 유럽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미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을 제치고 한국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미국 하원의원들에게 제기해야 할 매우 분명하고 직접적인 쟁점의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대등한 경쟁조건을 갖느냐 하는 문제이며, 하원의원들의 수수방관으로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일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의회비준 속도를 재검토하고 재평가하는데 강력한 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의 북한상황이다. 최근의 북한상황은 한-미 두 나라의 상호 안보이익을 위해 동맹관계 강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 교훈은 지난 반년간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여러 차례 회합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금년 2월 한국을 방문한 클린턴 국무장관과 한국 정부의 회합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두 나라 정부의 고위관리들의 잦은 접촉을 통해 계속되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양자 동맹관계를 감안할 때 주요 무역협정의 일부 조항과 관련하여 마찰을 빚어서 사소한 통상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이 의회의 의견을 한-미 자유무역협상 지지 쪽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취임 첫해의 오바마 대통령은 근본적인 의료개혁과 기후변화 입법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의회에 상정되면 문제가 조금은 복잡해질 것이 뻔하다. 그러나 금년 말은 아닐지라도 내년 초에 의회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내년 4월 G-20회의 참석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

할 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의회비준 소식을 가져오는 적기가 될 수 있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것이 두 나라의 파트너십을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고히 하고, 앞으로 두 나라의 상호이익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질의 · 응답

Q 여러 가지 관심사에 대하여 두루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보다 깊고 관념적인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한다. 우선, 사공일 박사와 이명박 대통령이 “스탠드 스틸”의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합의를 한다 해도 그러한 합의의 공표가 이루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탠드 스틸 자체는 매우 부족한 것이다. 국내외적 각종 압력을 감안할 때 그들이 왜 스탠드 스틸을 요청했는지 이해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스탠드 스틸보다 더 큰 약속을 정부들에게 요청했어야 했다.

둘째,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역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나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문제에 대하여 묻겠다. 아시겠지만 재귀시 바그와티(Jagdish Bhagwati) 교수는 열렬한 세계적 자유무역지지자이지만 자유무역협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가 파악한 문제의 하나는 166개국 이 모이고 수천 쪽의 문서(대부분 읽히지도 않은)가 쌓이면 어떤 진척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제안된 모든 것에 이의를 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척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G-20은 합의를 이루는 데 다소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는 세계적 합의에 도달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양자간, 3자간 협정에 기본적 기준을 두는 것이다. 합의에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세계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메커니즘(mechanism)을 마련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그것은 다음 번 이 자리에서 내가 강연할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온전하게 답변하자면 45분이 다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강연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에 관해 간략하게 미리 이야기 해 보겠다. 우선 질문자가 스탠드스틸이 불완전하다고 한 것은 맞는 말이다. 그 때문에 나는 이 합의가 오해되고 잘못 적용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무역관련 관료들이 모이면 그들은 여전히 국경 장벽(관세와 그 비슷한 것들)에 관해 일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오늘날 대부분 지역에서 관세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GATT 및

WTO 협상과, 양자간 및 역내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광범한 진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농업을 비롯한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진정한 문제와 주된 왜곡은 국내적인 규제를 통한 차별적 관행에서 온다. 국내적인 규제를 조화시키는 국제적 합의를 이룩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제는 각국의 상이한 유권자들에게 자원을 배분하도록 마련된 것이고, 그 나라의 특수한 조건에 맞도록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공통의 규제관리 체제를 갖기로 했다고 말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규제정책의 조화를 추구해 온 미국/EU를 예로 들어 보자. 미국과 EU처럼 높은 수준에 와 있는 나라들도 약품규제나 기타 경쟁규제 유형을 조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현재의 규제상황에 기반하여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규제를 바꾸면 투자의 가치가 훼손된다. 이런 일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나는 미국과 EU의 관리들에게 규제를 조화시키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아직 규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미 투자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규제의 변화에 반대하는 이익집단이 생길 수 있는 신기술 분야에서 먼저 시작하라고 권유한다.

세계적 자유무역에 이르는 문제에 관한 둘째 코멘트에 답하겠다. 세계에 너무 많은 나라가 있는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30여 년 전 맥도날드 대사와 내가 협상을 하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자격을 얻은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많은 나라들이 무역협상에서 다소의 혜택을 얻어내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 대부분은 도하 라운드에서 그다지 할 일이 많지 않다. 제네바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해 보면 진짜 병목현상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조화시키기 어려운 주요 이해관계를 가진 10~15개국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도적 국가들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합의(양자, 지역, 또는 다자간)는 나오지 않는다. 한국도 이제 이 그룹에 들어갔다. 내가 주도적 국가들 간에 제휴관계를 구축하는 일, 경쟁관계에 있는 경제권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는 일, 그리고 특히 중국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계무역시스템에서 우리는 이제 제휴의 정치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전의 다자간 협상보다 협상하기가 더욱 복잡해졌다.

세계적 자유무역은 WTO의 궁극적 목적이지만 WTO는 이를 성취할 권능이 없다는 그 다음 질문의 논점으로 넘어가겠다. WTO 종사자들이 알아낸 것은 그들이 다루는 문제의 대부분은 전적으로 무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상 무역은 문제의 근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무역과 투자에 대한 왜곡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여러 분야의 각국 정책을 바꾸는 결정을 내릴 권능은 WTO에도 없고 각국 통상장관에게도 없다. 이런 일을 하려면 앞으로 WTO가 일을 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하고 또 누구를 상대로 일을 하는지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각국별

정부 운영체제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자신이 겪은 미국에서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미국의 국무부와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 여러 기관 사이에는 거대한 방화벽이 있다. 이런 부처들은 공동으로 일을 해야 하지만 때로 관료적인 우선순위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Q 세계경제의 현황과 한-미 관계의 전망에 대한 포괄적인 최신정보에 대하여 감사 드린다. 간략하게 3가지 질문을 하겠다. 먼저 G-20에 관한 것이다. G-20 정상회의의 발족은 현재의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귀하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 숲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최소한 바닥을 친 것 같고, 세계경제에 대한 우리의 전망이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G-20의 의제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피츠버그 정상회의와 내년 초 한국에서 열릴지도 모를 정상회의 의제의 초점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G-20이 영구히 G-8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모두가 알듯이 현재의 G-20 정상회의는 제도적으로 불안정하다.

둘째, 기후변화 문제이다. 귀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가 금년 12월까지 탄소배출에 관한 타협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코펜하겐에서 회합을 가질 국제사회도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관리체제에 관한 협상타결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협상 일정이 그 이후로 연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협상의 타결시기를 언제로 보는가?

셋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것이다. 이 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 전망이 밝다니 매우 반갑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이 협정을 보완할 부수적 협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수적 협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원래대로 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서 빚어진 마찰이 미국 의회 비준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는가?

A 먼저 G-20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겠다. G-20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보다 안정된 제도적 역할을 갖게 될 것이냐는 물음을 내놓을 단계에 왔다고 지적한 것은 옳다. 피츠버그 정상회의 의제 중에서는 여전히 국제적인 금융개혁을 위한 시급한 조정과제와 향후전망, 도하 라운드의 부활문제 등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각국의 통상각료들이 도하 협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를 의논하고 있으며, 많은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신임 인도 상무장관은 9월 초 뉴델리에서 통상장관들의 모임을 주재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협상의 양태, 제네바 협상 규칙을 위

한 농업과 제조업에 관한 기술적인 어휘 등 합의의 장애를 극복할 여러 가지 구상들이 다듬어질 수 있을 것이다.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무역에 관한 건설적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협상테이블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G-20 정상회의는 과거의 성취를 기초로 추진되는 것이 제도적인 이유로나 실질적인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스탠드 스틸의 내용을 보완하고 도하 라운드를 진전시키는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년의 서울 회의에서 진척의 기준들이 달성되었는지 평가하여 활동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타협을 위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G-20의 장래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G-20의 제도적 측면을 최선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한국, 미국 그리고 그 밖의 곳에서 내년 가을과 겨울에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토론과 브레인 스톰을 가질 필요가 있다. G-20이 G-8을 대체할 것인가? 이런 종류의 제도는 해체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근의 빈약한 성과를 고려할 때 계속해서 G-8에 많은 신임을 부여하기도 어렵다. G-8은 그렇게 효율적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G-8을 넘어선 다른 개량된 제도에 더 우선권이 부여될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기후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여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지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다. 기후변화 입법에 대하여 금년 중 하원이 하고자 하는 일과 상원이 하고자 하는 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상원과 하원의 이견은 전반적인 목표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이한 유권자 집단 사이에 고통을 분배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런 집단을 무료배정을 통해 보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세금지출을 통해 보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입법이 지체되어 아마도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원은 200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을 20% 감축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다. 이것은 금년 12월 코펜하겐 협약의 일반적인 조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코펜하겐의 협상대표들은 이런 목표에 미달할 것이고, 기껏해야 구체적 수치가 없는 잠정안에 합의할 것이며, 구체적 수치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가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년까지 이런 진척이 제한적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개발도상국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으로부터 확고한 약속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끝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부수조약에 대한 물음에 답하겠다. 오바마 행정부

가 협정의 재협상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있었지만 재협상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된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현재 양국 고위관리 간의 양자적 협의는 자동차 부문을 포함한 우려의 대상이었던 부문에서 호혜적인 양자간 협력 협정 등으로 FTA를 강화하는 방안이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엔진기술, 오염통제기술을 개발하는 공동노력을 목표로 한 협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 이런 일들은 이미 민간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은 이미 미국의 제휴사와 일을 시작했다. 미국 정치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일들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미국 유권자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할 좀 더 강력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쇠고기 문제는 거의 모든 쟁점을 해결했다. 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상원 금융위원회의인 맥스 보커스(Max Baucus) 의원장이 좀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인데, 실은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되기를 원하고 있다. 앞서 말한 여러 이유로 협정은 비준 쪽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 협정비준 문제는 곧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고, 비준을 원하는 보커스 상원의원이 협상이 잘 마무리 되도록 미국과 한국의 관리들과 협력을 할 것이다.

Q 좀 다른 질문을 하겠다. 몇 달 전에 내가 읽은 논문에 의하면 미국의 총 부채는 미국 GDP의 350%에 달한다고 했다. 이것은 공공부문, 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부채를 모두 합한 것이다. 지금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제침체의 궁극적이고 장기적 해결방안으로 미국의 소비자가 이 부채를 상환한다면 세계무역은 둔화되고 경제회복 속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참고 삼아 말씀 드리자면 금년 3월 기준으로 한국의 총 부채는 GDP의 26%이다. 만일 우리가 출구전략으로 부채를 갚아서 부채액을 줄여야 한다면 적절한 부채는 GDP의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며, 그 수준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A 적정부채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내가 책임자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별로 연구도 안 한 문제에 대하여 무턱대고 아무 말이나 해서 쟁점을 흐려놓고 싶지 않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부채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앞으로 저축은 늘어나게 되어 있으며, 그것은 향후 10년이나 그 이상 추정성장률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소비자가 보다 덜 구매를 할 때 이것이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은 무역의 구성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이 더 투자를 하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더 많은 무역을 하게 되지만 다른 종류의 제품이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의 휴대폰은 성능이 좋지 않아 더 좋은 휴대폰을 필요로 하지만 아마 휴대폰을 덜 사게 될 것이다. 미국인들은 한국에서라면 어린이들도 거

들며 보지 않는 구식 휴대폰을 쓰고 있으며, 그런 구식 모델의 휴대폰이 미국에서 팔릴 것이다. 이처럼 무역의 구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의문은 이러한 투자가 더 높은 성장을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무역량이 더 늘어날 것이냐는 것이다.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것이고, 지난 10년간 미국을 도취하게 만든 개인소비와 수입수요의 유형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성장기반의 재정비와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구조조정을 못하고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 향후 몇 년 내는 아닐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인플레이션 폭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려가 대두하고 있고, 버넨키(Bernanke) 의장은 미국이 이런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조만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증할 것이라고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한국의 태양에너지 개발에 대하여 코멘트하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두 당사국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협정이 통과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범적 협정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는 태양에너지 기업을 지원하려 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체 에너지에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A 한-미 무역협정 협상 당시 미국은 이것이 이 지역에서 또 다른 협정을 유발할 것이며, 그것은 우선 한-EU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단기적으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의 협상에서 빠른 진척을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일본 정부는 정치적인 취약점을 지니고 있고, 총선이 끝난 후에도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을 것이며, 2004년 이래 협상을 교착상태로 몰아넣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일본 정부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로 남게 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면, 나는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무엇이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나라의 생각이 크게 다르다. 상업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앞으로의 작업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는 잠정적인 협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타협이 가까운 장래에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그것이 도하 라운드의 부활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태양에너지와 보조금 문제에 관해서 말한다면, 기술을 위해 기업에 돈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다. 효과가 있어야 한다. 송전 그리드(grid)를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 바이오 연료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은 투자 신호에 왜곡을 초래하여 비경제적인 투자와 생산 결정을 야기했다. 우리는 앞

으로 보다 엄격한 시장통제를 수반한 민간-공공 제휴관계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산업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스마트 그리드 송전기술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BM이 이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 두 나라가 협동과 혁신을 통해 혜택을 함께 볼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

Q APEC회의에 참가했다 오셨으므로 APEC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다. 16년 전인 1993년 미국은 시애틀에서 APEC정상회의(Blake Island Leadership Meeting)를 개최했는데 그 때는 클린턴 행정부 출범 첫해였다. 당시 클린턴은 이 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그 이후 훌륭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금년도 이 모임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후 내년에는 일본, 그 다음은 미국에서 열리도록 되어있다.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시 기회를 갖게 되었다. 보고르 성명은 2010년까지는 선진국에서, 2020년까지는 개도국에서 무역과 투자의 완전한 자유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내년의 일본과 그 다음해 미국에서 지도자들이 모일 때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모임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지도자는 아마 브루네이의 술탄 뿐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다.

A 먼저 지적해 둘 일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정책을 재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면서 점차 분명해지고 있는 사실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백악관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미국-아시아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놓을 것임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런 점이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표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작업과 11월의 APEC 각료 및 지도자 회의까지 몇 달간 이루어질 작업을 통해 2011년 일본과 미국에서 추진될 의제에 대한 준비가 시작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배경을 감안한다면 APEC 정상회의는 진정 아시아 태평양 회합이 될 수 있도록 호넬루루에서 열기를 원할 것이라고 본다.

보고르 공약은 다른 시대에 만들어졌다. 그 회의에는 브루네이의 술탄이 참석했었고, 힐러리 클린턴과 프레드 버그스텐도 참석했었다. APEC의 발의사항이 어떻게 진전되어 가는지 살펴보면 2010년에는 획기적인 변모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자유무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지는 않는다. 원래 APEC 회원국은 12개국이었으나 지금은 21개국이다. 회원국이 늘어남에 따라 APEC에서 어떤 문제에 합의를 도출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 특히 경제발전단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국가들이 개입되는 경제적 통합문제가 그러하고, 러시아의 회원가입으로 야기된 정치적 문제가 그러하다.

지역통합에 대하여 각국은 지금 보다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통합의 혜택을 무역과 투자의 증가를 통한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진, 정책의 더 큰 안정성 조성, 그리고 거래비용과 각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관습과 여러 가지 관료주의 폐해를 제거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다.

APEC회원국들이 공표한 양자간 및 지역간 무역협정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합(melding)에는 조화(harmonizing) 또는 연계(linking) 등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보다 융통성이 있고 응용의 여지가 있는 말이다. 이 말은 10여 년 전 싱가포르 외교장관 조지 여(George Yeo, 楊榮文)가 지역통합의 중요성과 당시에 P5로 명명했던 태평양지역 핵심그룹 국가의 형성을 제안하면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우리 연구소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한국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P5가 아니라 P6라고 불러야 한다.” 고 말한 적이 있다. ASEAN +1, ASEAN +3, 일본이 제안한 10+6, 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 범태평양 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 제안 등 이런 유형의 과정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도 이에 대해 주목을 해왔다. 나도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다.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그리고 이제 미국 등 소수의 핵심국가들을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다른 많은 주요국들이 이 나라들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한국은 이들 국가 대부분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일본과 중국도 여러 나라와 협정을 맺었다. 동북아시아 자유무역 연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 이를 위해 오래 동안 일해 온 사람은 보다 광역의 지역통합방안에 의해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중국을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중국, 한국-중국, 미국-중국 등 중국과 양자적 교섭을 할 때 일어나는 어려움을 더 잘 조정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나는 APEC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한다. APEC은 매년 주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내년 일본에서, 그리고 그 다음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의 기초를 정하게 된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APEC의 여러 주역 국가들은 지금 전진을 시작할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역내무역과 투자개선을 통해 미래의 성장을 구축하는데 현재의 경제위기를 이용할 때이다. 내 답변을 이런 낙관적인 말로 맺고자 한다.

Q 멕시코와 한국의 경제규모는 비슷하다. 멕시코의 시각에서 NAFTA를 간략히 평가해주시기 바란다. 한국에서는 지금 멕시코가 NAFTA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여러 가지 오해가 떠돌고 있다.

A 이 문제에 관하여 내가 쓴 책을 요약해서 답변하겠다. NAFTA를 예상하고 1990년대에 정책개혁에 착수하여 큰 진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이 협정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없었던 것에서 교훈을 하나 도출한다면, 그것은 멕시코 경제에 적정한 투자와 조정이 후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부분적 이유는 NAFTA가 발효 된지 1년 만에 멕시코가 “폐소위기” 라는 경제적 위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NAFTA가 발효된지 1년 후 멕시코는 급격한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큰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을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추구했다. 거시경제정책은 매우 보수적이 되었다. 긴축 통화 및 재정 정책이 투자, 특히 인프라 부문의 투자 가능성을 제한했다. 또한 에너지 부문을 비롯한 경제개혁의 정치적 여지가 없어졌다. 이 두 부문에서 멕시코는 부진했다.

그러나 2007년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조인되던 날 부총리는 한국이 미국의 경쟁에 보다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처하게 될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국내적 경제개혁과 투자 방안을 소개했다. 멕시코가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또한 미국이 잘 하지 못한 일이기도 하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시정해야 할 처지이고 그는 경기부양책과 광범한 무역조정 지원프로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그 일을 시작했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주어지는 무역과 투자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훈이다. 국내적으로 이런 준비가 있는 나라는 해외국가들에게 그 이득을 챙기게 할 것이다.